

정회원기고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기고

“산림관리는 국가산림부 신설해 맡겨야”

글 한국산림기술인회 정 병 결 정회원

“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23년 기준 6,287천ha로 국토 면적 62.6%에 달하며, 이러한 산림 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 73%, 스웨덴 68%, 일본 68%에 이어 4위(전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율 80%)에 해당한다. 또한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총 1,018백만 m^3 , ha당 165 m^3 /ha로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 11.3 m^3 에 비하면 14.6배가 증가하여 2020년 FAO에서 발표한 세계 ha당 평균인 137.1 m^3 (10톤 트럭 13대 분량)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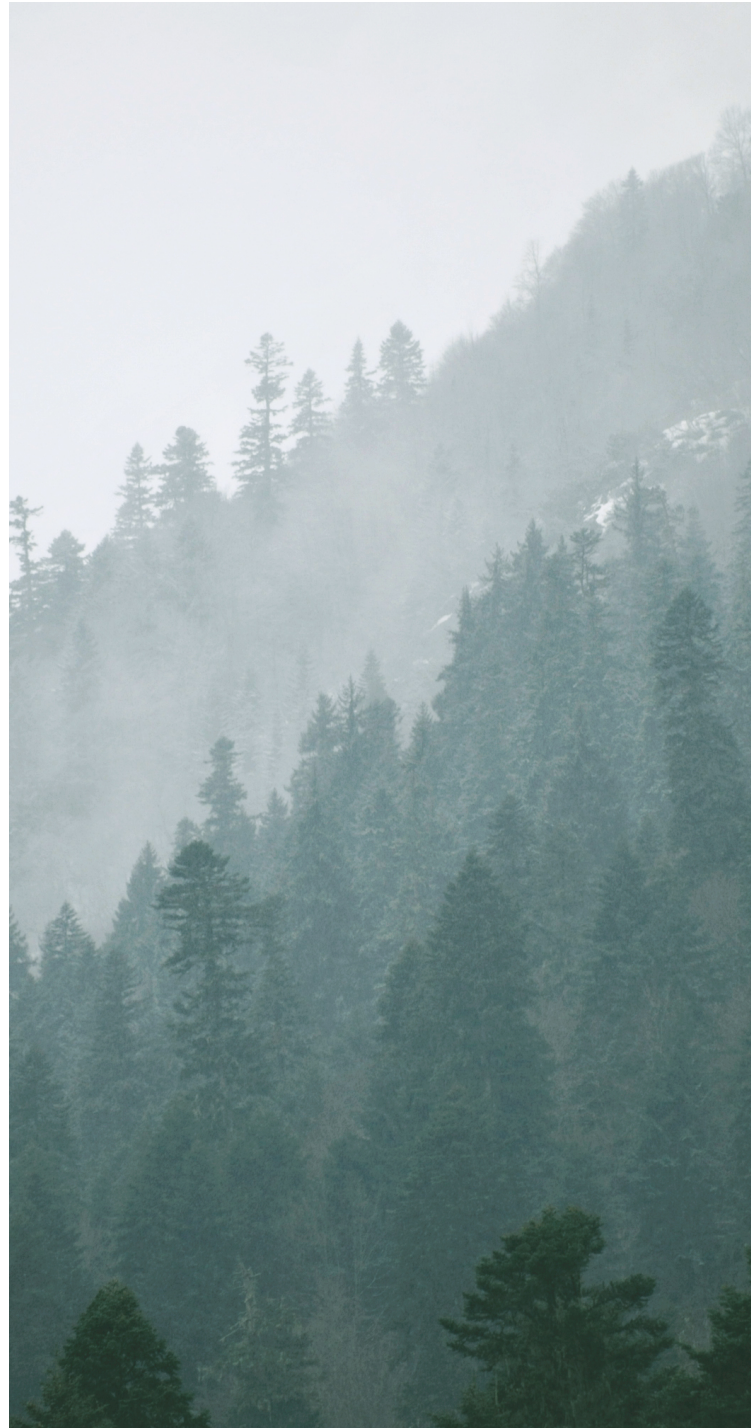
전체 산림의 26%는 차지하는 국유림 167만ha 중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면적은 152만ha,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의 부처 소관인 국유산림은 15만ha로써 2028년까지 국유림을 179만ha(28.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산림관리에 대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때”

지난 50년간 나무 심기, 숲가꾸기 등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푸르게 잘 가꿔온 우리 산림은 현재 OECD 평균의 30%를 상회하는 풍요로운 산림자원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에게 499만 원이 돌아가는 혜택을 주는 등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 성공국으로써 목재산업·휴양문화·치유 등의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였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로 상생협력하고 있다.

더불어 2023년에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감축 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전정리사업을 포함한 산림녹화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문서, 작업일지, 사진, 필름, 동영상, 포스터, 우표 등 전국적으로 발굴한 9,619건의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10일 2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2.~4.17, Executive Board)에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세계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민·관이 합심해 단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림녹화사업은 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개발도상국 ODA사업, 교육·훈련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부터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국제적 이슈 대응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산림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래된 헌 집에 식구가 늘고 몸집이 비대해지면 인력과 규모에 맞게 새로운 집을 짓거나 옮기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산림관리에 대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가의 원활한 산림관리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일부 정책 전환,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산림정책·시행의 발전을 위해 본 지면을 빌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 정비 및 업무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산림청의 국가관리 자연휴양·치유 등 업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 이관하고, 산림자원조성 업무를 이관받아 가칭 ‘국가산림부’ 신설을 제안해 본다. 전국 23개 국립공원(68만ha) 중 60%인 육상국립공원(41만ha)의 ‘야생조수’ 이외의 업무를 산림청이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542곳의 사찰이 보유한 약 6만ha의 산림도 건강한 숲으로 가꾸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경영 임지 확대가 필수조건이다”

1996년~2023년까지 29만ha의 사유림 매수 결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52만ha(24%)이다. 독일 32%, 미국 31%, 일본 3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면적은 30~40%가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방부 등 부처가 보유한 산림 중 목재생산 가능 임지는 산림청으로 이관하여 2024년 현재 17.4%인 목재자급률을 2029년까지 27%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이 요구된다”

2023년 기준 국유영림단 1만2,380명과 산림조합영림단 1,643명이 산림사업을 실행중이다.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최근에는 드론과 첨단 기계장비 등을 조작하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가칭 ‘산림사업마이스터’로 명칭을 변경, 자원조성·재난 등 산림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거나, 공사화(公社化)로 산림관련학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 부국으로서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울창하게 조성하는데 국가의 주도가 필요하다. 현재 외청(外廳)인 “산림청(山林廳)”을 “국가산림부(國家山林部)”로 승격시켜 세계화를 선도하는 K-forest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인류의 번영과 지구생태계 보전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산림 기술 강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